

대한민국 상위 1%의 ‘두 얼굴’

근로소득세 전체 33% 납부… ‘탈세 적발’ 절반 차지

대한민국 상위 1%가 납부한 근로소득 세가 전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한 납세자가 있는 반면 지난해 정부의 추징액 부과 대상 절반이 상위 1%인 것으로 알려져 탈세 폼수를 부리는 부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1%의 ‘두 얼굴’에 대해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있는 한편,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인 18만 55명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290억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339억원의 32.6%를 차지한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 471조 7060억 원의 9.4%인 44조 4257억원이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 80%의 근로소득 총액은 205조 4955억원이다.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 정도다. 근로

<2015~2017년 근로소득자 집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근로소득자 인원	17,333,394	17,740,098	18,005,534
전 분위별 인원(10%)	173,334	177,400	180,055
체 총근로소득(A)	4,130,302	4,399,935	4,717,060
총근로소득세액(B)	282,528	308,539	347,339

/자료=추경호 의원실

김두관 의원·추경호 의원 자료

1% 18만여명 11조 3290억 납부 예금 잔액 283.2조… 전체 45%

지난해 사업자 탈세 추징액 6.7조서 상위 1% 3.1조 차지

소득세 납부액은 3조 8184억원으로 비중은 11.0%다.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로 나타났다.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액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상위 1%는 예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18개 시중은행의 개인 고객 예금은 623

조 341억원이다.

이 중 잔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좌에 든 예금은 283조 2544억원으로, 전체 45.5%에 달한다.

상위 1% 계좌가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전체 504조원 중 224조원으로 44.3%를 기록했다. 2017년 말 처음으로 45% 선을 넘긴 뒤 줄곧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모두 2억 6748만개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계좌는 5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계좌는 221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좌는 553개였다.

이 의원은 “수년간 상위 1%가 전체 예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한국 사회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



착화한 사실을 보여준다”며 “현금자산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금액은 6조 782억 원이다. 이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한 부과액은 3조 1571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했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탈루

로 4조 5566억원의 부과 처벌을 받았다.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 3855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4774개를 세무조사한 결과, 91%인 4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탈루로 1조 5216억원의 부과금 처벌을 받았다.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층의 탈세·탈루가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탈세·탈루와 별개로 소득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역별 상위 1%의 연소득은 최대 9억원에서 적개는 6억원대를 기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상위 1% 연소득은 9억 1000만원이다. 이어 부산 6억 7000만원, 광주 6억 6000만원, 경기 6억 4000만원, 인천 6억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서울의 상위 0.1%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3056배에 달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태풍 복구현장 점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13일 경북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의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복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본입찰�行’ 가능성 배제 못해”

>> 1면 ‘아시아나항공 새주인’서 계속

SK네트워크 웽진코웨이 인수 포기 시장선 ‘아시아나 인수설’ 모락모락

채권단 관계자는 “M&A 과정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항공기 리스계약서는 각 항공사마다 계약형식과 비용이 달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리스사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제주항공을 운영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애경이 요구하기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톤브릿지캐피탈도 경영진 PT에 불참하면서 전략적 투자자(SI)의 컨소시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호 측과 채권단이 재무적 투자자(FI) 단독 입찰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전략적 투자자와 손잡지 않으면 본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자연스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내 항공산업의 주축으로 발돋움 할 수 있고, 면세사업과 신라 호텔, 아이파트몰로 대표되는 유통 사업을 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자산 규모는 4조 4100억원으로 현금성 자산 규모는 1조 1773억원이다. 더구나 최근 HD C현대산업개발은 대량 매매를 통해 보유 중이던 삼양식품 주식 127만 9890주(16.99%)를 947억원(주당 단가 7만 4000원)에 미래에셋대우에 처분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금액은 2조원 안팎으로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 마통 9兆 폭증

〈마이너스통장〉

마통 잔액 2년새 22.2% ↑

“LTV·DTI 선별적 완화 필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니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본격 시행된 이후 늘어난 마이너스통장만 9조원이 넘는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6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2017년 6월 41조원에서 2019년 6월 50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새 9조 1000억원이 늘면서 증가율은 22.2%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2015년 이후 반기별 마이너스통장 잔액·계좌수>

구분	15.6월	15년말	16.6월	16년말	17.6월	17년말	18.6월	18년말	19.6월
잔액	37.0	38.9	39.8	40.7	41.0	45.1	48.4	50.9	50.1
(증감율)	-	(5.3%)	(2.2%)	(2.2%)	(0.9%)	(10.0%)	(7.2%)	(5.2%)	(▲1.5%)
계좌수	375	376	373	372	373	390	406	406	407
(증감율)	-	(0.3%)	(▲0.8%)	(▲0.3%)	(0.1%)	(4.7%)	(4.0%)	(0.2%)	(0.1%)

증감율은 전분기 대비.

/자료=김상훈 의원실

직전 2년인 2015년 6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2017년 6.19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며 “2017년 6월 LTV 70%, DTI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 대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해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등을 선별적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봤을 때 자금동원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인수 개연성 여전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본 입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을 낮추고 경쟁사에게 전략을 노출하지 않다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때가 돼서야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KCGI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전략적 재무자로 참여하거나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본입찰에 참여 ▲유찰 후 가격 떨어뜨려 예비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인수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은 SK그룹이다. SK의 경우 출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SK네트워크가 웽진코웨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을 밝히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SK네트워크가 운용하는 위커힐 호텔과 연계해 신규관광 상품을 출시하면 단기 그룹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예비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본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후보자들이 모두 인수를 거부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통상적으로는 예비입찰 통해 지정된 적격인수후보자를 데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매각과정에 예비입찰을 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사 후 11월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계약을 맺는 후보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발표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